

구글 세금 회피, 디지털세 도입 절실... 국가 간 협력이 필수

글로벌 빅테크 세금 회피 문제
G20,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美, 자국 기업 보호에 보복관세 경고
“세계 디지털 기업 과세방법 검토”

글로벌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답보상태다. 해당 기업들의 저항도 있지만 대다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모국인 미국이 관련 법안 도입에 따른 관세보복 조치를 한 바 있어 더욱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주요 인사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디지털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구글세(Google Tax)로도 불리는 디지털세(Digital Tax)는 특정 국가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는 글로벌 IT 기업에 매겨지는 법인세와 별도 세금을 뜻한다. 기존 국제 조세 기준으로는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있을 때만 과세 가능했다. 디지털세는 전통적인 조세 기준에서 벗어나 ICT 기



구글 등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해 벌어들인 돈을 제 3국가 법인의 매출로 이전함으로써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2020년 G20에서 2023년까지 디지털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안 합의가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첫걸음도 못 떴고 있다. /DALL-E 이미지

술 특성을 반영해 실제 서비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됐다.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목소리는 여느 때 보다 커진 상황이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 디지털세를 적용받는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 국적 기업으로써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9년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정부차원에서 법안 조사를 시작해 “디지털세 제도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며 국제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최대 24억 달러 규모의 100% 관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 이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던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 9개국 또한 조사대상이 돼 관세 제재 조

치 등으로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다.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연대가 필요할 전망이다. 먼저 디지털세 도입을 시도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 보복 조치는 2021년 글로벌 조세개혁안 합의 후 일부 해소됐다. 당시 G20 국가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에 합의했다. 해당 조세개혁안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216억 달러, 30조 원), 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의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내용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한국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논란만 일고 결과는 없는 상황이지만 올해는 앞서 EU 반독점당국이 애플의 법인세 회피에 대해 총 130억 유로(19조 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리고 항소심까지 이겨 기대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EU 반독점당국은 지난 2016년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애플이 아일랜드 세무 당국에 납부한 실질 법인세율이 0.005%에 불과하다며 체납세

금과 이자를 합쳐 총 143억 유로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쟁사에 불공정한 환경을 만든다는 이유다. 애플은 해당 부과 명령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판정이났다.

해외에서 디지털세 도입과 실행이 시작되며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디지털세가 논란으로 떠올라 여론 때보다 관심이 커졌다. 지난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작년 국내 통신망 사용 비중이 28.6%에 달하지만 매출과 법인세는 축소 신고됐다”며 디지털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유럽 연합(EU) 최고법원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 지원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디지털세 도입을 옹호하기도 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이창용 “연간 성장률 2.2~2.3% 예상... 잠재성장률보다 높아”

(한국은행 총재)

기재위 국감

“美 대선 결과, 11월 금리결정 큰 변수”
금리인하 체감, 단발적 인하로는 부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내년 경제 전망과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 거시안정성 정책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부적으로는 금리인하 압력과 대외적으로는 여러 금리 인상 요인이 있어 원칙을 가지고 금리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 경제성장률 ‘수출’ 따라 달라져

이 총재는 수출에 대한 해석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보면 수출금액은 떨어지지 않은 반면 수출액은 떨어지고 있다”며 “자동차파업 등 일시적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오른쪽)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요인으로 수출물량이 떨어진 건지, 화학제품·반도체의 단가는 올라가는데 중국과의 경쟁으로 물량이 안 나가는 건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3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전망치와 크게 달랐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앞서 한은은 3분기 경제성장률(GDP)을 전분기 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전망한 0.5%보다 0.

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수출금액과 수출물량이 일정수준으로 둔화되고 있었지만 수출금액이 떨어지지 않은 채 수출물량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올해 3분기 GDP의 영향으로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4%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4%보다 낮아진 2.2~2.3%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내년에도 성장률이 낮아질 지 여부는 수출금액과 수출물량의 흐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1월 금리, 미국 대선 결과가 변수

이 총재는 정부의 거시안정성 정책과 관련해 가계부채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3월 -1조 7000억원에서 4월 5조원으로 반등한 뒤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2000억원까지 올랐다가 9월 5조 7000억원으로 둔화했다.

이 총재는 방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정부의 거시안정성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10월에도 효과가 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하고 은행의 대출공급을 옥죄 가계 부채와 수도권중심의 매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가계부채가 둔화하면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11월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달러 강세여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11월 금리 결정에 새로운 변수에 대한 질문에 “미국 대선 이후 환율 변동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 달러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내린 1384.6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 한때 1390원을 넘어섰다.

달러 약세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

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반(反) 이민 정책과 관세 부과 방침은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트럼프 당선으로 달러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강세가 더 강해질 수 있어 금리동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 금리인하 체감, 1회만으론 부족

이날 이 총재는 한번의 금리인하로는 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인하했는데, 대출금리로 체감되는 시기는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의 경우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 전에 (은행들이) 금리가 낮아질 것을 예상해 (미리) 낮추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금리인하 후 시장금리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금리를 1회 낮출 경우 효과가 적고 연속적으로 몇 번 낮추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바이오 정책 수립 규제개선 역량 총집결”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본격 착수
대통령이 위원장... 민간위원 40명

정부가 바이오 경제와 안보 등 국가 바이오 정책을 결정하는 범부처 민간 거버넌스 구성을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간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간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간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게 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 수립 △규제 검토·개선 △연구개발 전략, 주요 사업 투자계획 수립·조정 △연구개발·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대중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 바이오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